

전남문화재단서도 '미투'...전남도는 알고도 '미적미적'

간부직원이 여직원 2명 상습 성희롱...폭언·인격 모독도

도는 감사 요청 반려...2차 피해 불안 속 관가 확산 주목

전남도 출연기관 간부가 여직원 2명을 상습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전남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최근 각계에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남 관가(官家)로 확산할 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재)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남문화관광재단 5급 팀장 김모씨는 여직원 2명을 수개월간 성희롱한 것

으로 드러났다.

재단 조사 결과, 김씨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성여행, 발남시, 술자리 등을 요구하고 성적 언동도 잦았다.

피해 여직원 A씨는 "김씨가 '보고 싶다', '이쁜 얼굴 사진을 보면 기분이 풀릴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와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여직원 B씨는 "1박2일 성여행, 발남시, 술자리, 주말식사 등을 요구해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들 여직원은 "김씨의 성희롱 발언과

문자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직속 상관이다보니 거부하지 못한채 가슴앓이를 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또 사무실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잦은 폭언과 인격 모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과 함께 결재서류를 부하 직원에게 던지는 등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째 미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전남도가 성문제에 대해 인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기 때

문이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재단 측의 감사 요청은 가해자 조사만을 남겨둔 마무리 단계였다"며 "재단 측이 직접 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하라는 취지에서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요청 내용이 성희롱 문제라기보다는 재단 내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체 해결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문제인만큼 (자신의)불찰이다"며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와 성교육 전문가들은 전남도의 인이하 성 인식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행적인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인 데 전남도가 피해자인 약자의 입장에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해 은폐·방조자도 성실 의무를 위반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사건을 미온 대처한 것은 그만큼 성 인식이 낮고 조직이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생 직장이면서 위계 질서가 강한 공직사회 특유의 조직문화를 이유로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남기 농민 유족 국가와 '화해'

민사소송 마무리

살수차 경찰과 소송은 계속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감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강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전 재판장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한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쓴 물대포에 맞고 중대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의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차 타이어 파손하고 "신의 계시"



○...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20여대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10일 새벽 0시 45분께 순천시 매곡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매곡동 일대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매곡동으로 이사를 온 뒤 자신의 집에서 500m 범위 안에 주차된 차량만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신의 계시를 지키지 않으면 두통이 발생해 너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폭로 신빙성"...경찰, 조민기 성추행 본격 수사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52)씨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인터넷 게시물, 학교 자체 조사 등 내사 결과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측은 조씨에 대해 징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조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지난 20일 수리했다. 지난 20일 새벽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의

익명 게시물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페이스북 등에는 조 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한 졸업생은 "재학 시절 조민기 교수가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했고 누워 있는 나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2004년 이 대학 겸임교수를 시작으로 2010년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연합뉴스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점검

22일 광주시 재난예방과 직원들과 북구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문단원들이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해빙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징역형까지 가능

데이트폭력 양형 기준도 마련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었던 '스토킹' 행위(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형량을 결정하는 일)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고, 경찰과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도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 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 처벌·현장·지원·인식 4대 추진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톱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은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대상에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게 된다.

경찰은 제정되는 법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스톱킹은 형사입건, 데이트폭력은 구속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피해자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통해 신변경호, 주거지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인터넷·SNS 등으로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고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희기자 kimyh@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법원 '처벌 대상 될 수 없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운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민간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진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

92조의 6)을 동성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